

#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의 대선 공약화를 위한 제안서

## 주요 시민사회단체 제위,

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의료기관의 사적인 소유가 90% 이상이며(취약한 공공의료), 진료비 본인부담 비중이 높고(낮은 건강보험 보장성),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부실(주치의제도 부재)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 이러한 사실은 최근 OECD 보건의료 평가 단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.

지난 30년 동안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(1989)과 건강보험 통합일원화(2000)로, 보건의료 접근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은 상당 수준 향상되었지만, 공공의료와 일차의료는 변화가 없거나 퇴조하였습니다. 따라서 이 번 대선에서 포함시켜야 할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는 큰 틀에서 두 가지 제안이 포함되어야 하는 데, 그 중 하나가 공공의료 강화라면 다른 하나는 ‘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보건의료체계 확립’ 이어야 합니다.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다루면 균형을 잃은 정책공약이 될 것입니다.

그렇지만 과거의 정책 실패 경험이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하여 각 캠프에서는 그 공약화를 꺼리고 있습니다. 여론 형성의 어려움과 이해 단체의 반발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. 심지어는 무상의료 정책을 논하면서도 일차의료 강화의 핵심 주제인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거나 소홀히 다루는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. 이 같이 부담감을 느끼고 기피하는 현상은 과거의 정책 실패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세계적인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맥락에 알맞은 단계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만든다면 그러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.

일차의료연구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맥락에서 일차의료의 개념과 가치를 연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모임입니다. 이 번 대선을 앞두고 일차의료연구회는 주요 대선 캠프의 보건의료 공약에 ‘주치의제도 도입’을 포함시키기 위한 활동을 주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개하고자 합니다.

아울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.

### <세 가지 요청 사항>

1. 귀 단체에서 대선 캠프에게 보건의료 공약을 제안하고자 할 때,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.
2. 첨부된 <전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방안>을 귀 단체와 공동으로 주요 대선 캠프에게 제안할 수 있는 지 검토해 주시고 그 여부를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.
3. 조만간 가칭 <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>를 주요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 개최하고자 합니다. 귀 단체도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.

2012년 10월 2일

일차의료연구회